

제427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5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현안 질의
가. 행정안전부
나. 경찰청

상정된 안건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2. 현안 질의 2
가. 행정안전부
나. 경찰청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심사기간이 도과한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에 대하여 현안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배치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명식, 이기연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환영의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박수)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지난 7월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우리 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었습니다. 오늘 첫 출석이니만큼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보여 주신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행안부는 국정 운영의 중추 부처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장은 수해를 입으신 국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시고 또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안부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안전 또 국가균형발전, AI 민주정부 구현 등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말씀으로 인사말씀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회의 시작 전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상정해 놓고 하십시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계류 중인 34건의 청원 중 5건의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이 경과하였습니다.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의결로 심사기간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 5건의 심사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안 질의

가. 행정안전부

나. 경찰청

(10시05분)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안 질의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현안 질의는 별도의 보고 없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안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이광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오송 참사가 있었던 청주에서 온 이광희라고 합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위원장님!

지난해 8월 달의 오송 지하철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가 벌써 1년을 표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8월 4일 어저께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충북도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7월 달에, 저는 매주 격주로 토요일 새벽 6시 반에 독서모임을 합니다. 나이 고

하 상관없이, 남녀 상관없이 십여 명이 모여서 함께하고 있는 독서토론회에 저와 함께하
는 31살짜리 총무가 그날 출근하는 새벽녘 길에서, 오송에서 버스에 탄 채로 나오지 못
했습니다.

청주시민들은 청주에서는 재난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
한 기억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건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참사에 대해서 그날 사회
적 시스템 중에서 무엇 하나라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었다는 비통함
에 청주시민 전체가 굉장히 슬픔에 빠져 있고 과거의 먼 옛날 2년 전의 일이 아니라 현
재진행형으로 아픔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찌 됐든 청주시의회나 충북도의회조차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함께 합의했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1대 국회에서조차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안 됐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국정조사는 우리 행안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자
리에서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현재 남아 있는 유가
족들과 그리고 충북도민들이 함께 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국가가, 이에 대해서 국
회가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이런 응답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정말정말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성권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큰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권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사하구갑 이성권 위원입니다.

이광희 위원이 말씀하신 그러한 비통한 참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야를 넘어서 저희 국민의힘도 오송 참사와 관련된 국정감사에 충실하게
임해서 사고의 원인부터 그리고 또 피해자, 희생자에 대한 보상까지 저희들도 같이 철저
하게 임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두 달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풀어야 될 과제가 많습
니다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수도권 일극
주의가 너무 심화되었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는 것이 성장을 가
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5극 3특이라는 형태로 지역 특성
에 맞는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공약으로 내세우셨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지금까지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의 현안을 점검하는 그러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바

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면에 있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관련된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그전부터 위원회에서 계속 주장을 했지만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그리고 전라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각각의 제정법과 개정법이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지역과 관련된 법안심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부터 우리 위원장과 양당 간사님이 노력을 해 주셔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서범수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서범수 **위원** 예.

아까 이광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 관련해서 우리 야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도 유족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진상규명도 밝혀야 되고 좀 더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국정조사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진상규명을 좀 더 철저히 하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강제 수사권이라든지 조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보다는 오히려 수사를 더 해라, 수사를 더 하자는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진상규명에 안 맞느냐는 생각은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국회에서 우리 행안위에다가 국정조사를 요청하셨고 어느 정도 여야 간의 합의가 된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고 오송 참사 유가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진상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위로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협조하고 우리도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상 세 분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양당 간사님들께서는 의회 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조하고 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안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경기도 고양시갑 김성희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었던 대한민국통일건국회 관련해서 장관님께 추가적으로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루스포럼하고 대한민국통일건국회가 25년도에 국토대장정 행사를 하면서 ‘행안부가 후원한다’ 이런 명칭을 썼던 걸 저희가 봤습니다. 이것 재발 방지책을 여쭙봤었는데 담당 국장님이 오늘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전 신청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거다, 원래는 신청을 해야 된다는 절차를 설명했는데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무단으로 사용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행사 시작하기 전에 경고를 해서 행사 당일에는 후원 명칭이 빠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면 후원 명칭을 쓰려면 행안부에다 요청을 하면 쓸 수 있는 거잖아

요. 그런 요청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 맞는 말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요청만 하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청한 경우에 그걸 승인받아야……

○**김성희 위원** 예, 승인 절차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2년째 하는 행사라 작년에도 똑같이 했는데요. 올해 6월에 인지하게 됐다는데 24년도 행사 포스터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보시는 것처럼 이건 올해 게 아닙니다. 작년 겁니다. 작년에 3박 4일 하면서 후원에 행정안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때는 별문제 없이 넘어갔지요. 우리가 문제 제기를 안 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윤석열 정부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담당 국장은 우리가 이런 것까지 언제 다 찾아보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 것 한번 보시지요.

행사 최종평가 결과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행안부에다 제출한 서류에 후원을 행정안전부로 해서 현수막을 띄하니 걸고 저 사진을 찍어서 행안부에다가 ‘올해 돈 잘 썼습니다. 내년에도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했다는 거지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특히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공익을 해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의 평가 평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제재를 하거나 또는 지원되는 예산을 회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원사업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선정 과정을 한번 봤습니다. 건국회가 국토대장정 행사하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극우 성향의 음모론을 전파하는 사업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못 찾아낸 것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PPT 내용 보시면요, 일단 띄어쓰기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일정 한번 보실까요? 25년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24년 11월 29일까지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거꾸로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쟁이란’, ‘군부대’, 군부대를 잘못 쓴 오타지요.

그다음 장 보면 ‘입소를’ 해야 되는데 ‘입소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소을 한 후’, ‘석식후’, 하여튼 표현이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오타가 쓰여져 있는데 문제는 지금 장관님이 잠깐만 보셔도 저걸 읽은 사람이 이렇게 준비해 오면…… 담당 부장이 과장한테 서류 다시 써 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회사 같으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성희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우리의 소중한 한글을 이렇게……

○**김성희 위원** 그런데 보면요, 24년에는 89점을 받았어요. 커트라인이 76점, 평균이 83점이었고요. 25년에 점수가 심지어 더 올라가서 91.5점을 받았습니다. 커트라인이 72점에 평균 점수가 81점인데 91점이면 매우 뛰어난 거지요.

이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대한민국통일건국회 회장 얘기도 나오지만 그 앞에 ‘국민들 모르는 사이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이회천 국가정보원 출신 국민의힘 중

양연수원 교수의 강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 한번 보시지요.

그다음 장 보시면요, '22대 국회에는 중복세력이 드글드글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분이 강연에 사용했던 교재를 보시면요, PPT 8번 한번 봐 주세요. 대한민국이 공산화로 가는 길에 마을경제공동체…… 행안부가 주최하고 있는 주민자치사업이 공산화로 가는 목적지라고 하고 있는데 행안부가 이런 사업에다 지원해도 되니까,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 다 조금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전혀 체크를 하지 않고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24년에 이렇게 됐고 25년에 똑같이 한테다가 91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건 심사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행안부는 장관이, 12명 뽑고 아마 3명을 국회의장이 뽑는 절차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치는데 그 안에서 자기들은 별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심사위원은 도대체 누가 뽑는지, 행안부 담당 국장과 실무진들이 어떤 입김을 미쳤길래 이따위 보고서가 91점 점수를 받아서 쉽게 통과해서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지, 혈세가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 살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일리 있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박덕흠 위원입니다.

청장직무대행님, 오송 참사 때 경찰이 수사를 하셨나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때는 경찰, 검찰 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박덕흠 위원**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검찰에 이송을 해서……

○**박덕흠 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했잖아요, 초기에?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초기에 하다가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덕흠 위원** 검찰로 넘긴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박덕흠 위원** 그러면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수사 진행 상황을?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는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박덕흠 위원** 국정조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잖아요.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수사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든가 이런 점도 나올 수가 있을까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박덕흠 위원 알겠습니다.

PPT 좀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 총기 사건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경찰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경찰이…… 인천 송도 총기 사건 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박덕흠 위원 거기 보면 이렇게 경찰특공대가 출동하는 데 한 40여 분 걸렸거든요. 그런데 경찰 기동·특공대가 이렇게 한 40분씩이나 시간 걸려서 도착을 하면 현장에서 사고가 있을 때 대응이 제대로 안 되지 않을까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특공대가 내용을 전달받고……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착하는 특공대 출동 시간, 40여 분씩 걸리는 시간을 뭔가 대책을 세워서 이 부분을 한 일이십 분이든 이렇게 도착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런데 특공대 출동 시간을 따져 보니까 특공대가 출동 준비를 하고 복장을 갖추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이렇게 소요……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런데 복장 갖추고 하는 데 15분씩 걸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런데 그 신고 내용에 따라서 복장……

○박덕흠 위원 분명히 총기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신고할 때.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전달을 받고 특공대가 복장을 갖추고 준비해서……

○박덕흠 위원 복장 갖추는 데 15분씩 걸렸다 하면 이게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군대에서도 출동하면 배낭 싸고 하는 데 몇 분에 출동하게 돼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행님 얘기대로 옷 입는 데 한 15분씩 걸렸다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믿음을 안 갖지요. 그리고……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보다 더 훈련을 강화해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래서 아파트 진입하는 데도 한 67분이 소요가 되고 이런 부분이, 저는 경찰에 대한 신뢰가 많이 있는데 이 총기 사건을 보면 너무나 안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리고 무전에 방탄헬멧, 방탄방패가 없어서 진입을 못 한다, 그런데 방탄방패라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방탄방패는 진입작전을 할 때 실제 방패처럼 크게, 한 7kg 8kg 정도 되는데 이게 특공대에만 지급이 돼 있습니다. 실제 방탄방패는 우리나라가……

○박덕흠 위원 그런데 물어보니까 방탄헬멧은 있어도 방탄방패는 없다고 하던데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없습니다. 지구대, 파출소에는 방탄……

○박덕흠 위원 없고 특공대에만 방탄방패가 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특공대에만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40분에 아파트 도착했으면 67분 동안, 그동안에 방패를 가지고

헬멧 쓰고 진입하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왜 이렇게 걸렸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경찰서에는 방탄방패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

○박덕흠 위원 아니, 특공대가 도착을 했을 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특공대가 도착을 해서 안이 밀폐된 공간이었고 안에 피해자 가족들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특공대가 안의 상황을 또 파악을 해야 되고, 이 밀폐된 공간에 특공대가 진입을 하려면……

○박덕흠 위원 지금 그렇게,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1초가 급한데, 그 안에서는. 그렇잖아요, 이게? 시각이 그렇게 초, 분으로 급한데.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래도 특공대가 안에 진입을 하려면 안의 상황이 어떻고……

○박덕흠 위원 그러면 특공대는 방탄방패하고 방탄헬멧은 갖고 출동을 한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특공대는 다 장비를 갖추고 출동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진입을 해서 빨리 사람을, 인명을 구하려고 해야지 그동안에 진입하는 것도……

추가질문 안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1분만 더 달라고요.

○위원장 신정훈 30초 내로 해 주시지요.

○서범수 위원 30초 단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렇습니까?

○박덕흠 위원 그러면 그냥 구두로 할게요.

○위원장 신정훈 원래 전체적으로 5분 이내에 하기로 했는데요.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분 안 할게요.

○위원장 신정훈 추가질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분 내로 해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매뉴얼도 만들고 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 이렇게 또 재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행님께서 확실히 만들어서 그 대책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또 스토킹 범죄 있잖아요. 이게 경찰 대응 방법도 개선이 필요하 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최근에 연이어서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서 제가 경찰……

○박덕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행께서 어디를 가는데 누가 자꾸만 뒤에서 뒤따라오는 것 같고 그랬을 때 불안한 감은 느끼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누구든지 간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려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참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장관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됐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어제까지 93.6%고요. 그다음에 4736만 명이 지급을 받았습니다.

○모경종 위원 방금 말씀하신 93%를 넘어가는 수치는 전국적으로 다 고르게 나온 수치인가요, 아니면 어떤 지역적으로 편중이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역적으로는 다소 편중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단체별로 편중이 있지는 않고요.

○모경종 위원 광역자치단체는 다 비슷하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농촌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지급률이 낮은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전국적으로 어떤 광역자치단체 가리지 않고 다 많은 신청이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일 것 같네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60%대, 70%대인 시군이 한 다섯 곳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은 대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다가 이것이 소진됐다가 아니면 사용기한의 문제 때문에 일시 중지한 곳들이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별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그룹별로 문제가 있는 지점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군 장병들은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본인의 군 복무로 인해서 접경지역이나 다른 곳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 이 소비쿠폰 자체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대안을 세워 놓은 게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일단 군 장병 같은 경우에는 나라사랑카드를 지급받아서 쓰고 있는데 나라사랑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사랑카드는 군부대 내면, 그러니까 전국 어디에서든 PX 같은 면세점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국방부에 협조 요청을 해서 지금 11월 말일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그 기간 중에 전 장병들에 대해서 휴가를 실시하도록 요청을 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모경종 위원**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군부대가 있는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이 소비쿠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아시겠지만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군부대들이 그 지역 상권을 먹여 살리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군 장병들이 단순히 PX나 휴가 때 돌아가서 쓸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상권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다각적으로 모색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게 전국에 걸쳐서 모든 지자체가 다 걸려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소비쿠폰에는 자기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군 장병들에 대한 양해 절차는 다소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 지자체에 군 장병들에 대한 양해를 얻어서 주둔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앞에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이 송도 총기 사건 이야기하셨는데요. 상황관리관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당시 상황관리관이 몇 분 만에 출동했습니까, 현장에?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상황관리관이 처음에 현장에서, 상황실에서 상황 관리를 하다가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현장에……

○**모경종 위원**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이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시간이 얼마큼인지 여쭙보는 겁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

○**모경종 위원** 뒤에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없으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7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직무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상황관리관이 서장을 대신해서 현장을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경종 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무대행께서도 몇 분 걸렸는지도 파악이 안 되어 계시는 거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제가……

○**모경종 위원** 그러기를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돌아가신 분께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요.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는데 총기 청정국이라는 나름의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인데 총기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총기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기 규제는 되고 있는데 총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규제 또는 부품에 대한 규제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대안을 좀 갖고 있으신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저희가 1년에 두 번 법무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불법 무기류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도 받고 또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강력한 단속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직무대행님, 불법 무기류 신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불법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는 유튜브나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냐 여쭙보는 겁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중에 불법 무기류를 제작할 수 있는 유튜브 사이트라든지 유튜브 내용에 대해서 경찰도 모니터링을 하지만……

○**모경종 위원** 모니터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고 경찰 내에서 지금 자성, 반성을, 성찰을 철저하게 하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1분을 쓰실 때에는 반드시 허락을 맡고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지난달 연이어서 교제폭력,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지난 7월 26일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했고요. 7월 28일에는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에는 대전 교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지역이 다 각각이기는 하지만 3일 상간에 이렇게 3명의 사건이 발생했고 그중에 2명이 사망했고 1명이 그나마 목숨을 건졌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될 사안이고요.

대통령께서도 무능한 대응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어요. 그러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국여성의전화에 의하면 지난 4년간 교제폭력으로 최소 181명의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살인미수까지 포함하면 555명의 여성이 피해를 입었고요. 여기에 피해자 부모까지 합하면 650명이 생명을 잃거나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3시간 30분에 1명꼴로 교제폭력에 의해서 여성이 사망하거나 겨우 목숨

을 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유재성 경찰차장님,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난 31일 날 대전 방문하셨네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향후 조치 사항도 발표하셨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경찰이 조치 사항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해 9월 24일에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교제 살인이나 스토킹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발표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피해자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혐의를, 그러니까 위험성이 굉장히 높후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피해자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혐의를 적용해서 형사 입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울산 피해여성도 그렇고 대전 사망여성도 둘 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발표한 수사본부 발표에 의하면 처벌불원의사를 표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할 것 같으면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제폭력 같은 경우는 관련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의 일반폭력을, 폭행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제폭력이라고 하더라도 동거 관계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가정폭력법을 적용하고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리고 또 헤어진 다음이라든지 이런……

○박정현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 경우는 교제폭력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응책만 내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응책만큼 대응이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운 목숨들을 잃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래서 저희……

○박정현 위원 대응책을 다시 냈다 해서 그게 확실하게 대응이 되리라는 보장이 지금 있습니까? 자신하실 수 있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제가 그 부분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박정현 위원 확신하실 수 없으면 안 되지요. 사람의 생명을 잃는 문제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경찰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일단 대전 사건, 두 가지만 좀 짚겠습니다.

하나는 사건 발생 8시간 30분이 지나서야 경찰이 피해자 가족 보호를 했어요. 모르는 모양이네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국여성의전화 분석에 의하면 2024년 건만 해도 피해자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살인이 19건 그리고 살인미수가 76건으로 95건이 피해자 주변인들에 의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일 피해자의 행방이 굉장히 묘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즉각적으로 조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저희가 현장에서 피해자 가족분들의 경찰서 출석 요구는 했지만 출석하는 시간이 조금 걸렸고……

○박정현 위원 시간이 어떻게 8시간 30분 후에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래서……

○박정현 위원 제가 한두 시간이라면 이해하겠는데요. 8시간 30분 후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다면 경찰이 그것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분명히 경찰이 잘못된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번 대전 사건의 경우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이 잘못된 부분이 없었는지 한번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2일에 한 번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아마 경찰이 방문한 것 같은데 여기 경찰청 자료요구 답변에 보면……

PPT 띄워 주세요.

보면 ‘3개월간 동거하였고 비밀번호 공유하는 등 공동공간으로 판단해서 주거침입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화할 때 피해자가 분명히 ‘전남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흘려두고 적절한 조치를 안한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경찰이 매뉴얼대로 했는지 저는 몹시 의문이고요. 매뉴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그 점검 사항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더 설명드리면 제가 화상회의를 통해서 시도청장에게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대전서부서에 방문해서,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지금 경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박정현 위원 최대한의 조치가 뭔지를 보고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 부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성 범위가 강

력범죄로 이어진 한 70여 건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법률 개정까지 포함된 관계성 범죄의 종합대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마련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서 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경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국회에서 지금 본 의원이 낸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갖고 이 법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신정훈 자, 정리해 주시지요.

○박정현 위원 이제 죽어야지 헤어질 수 있는 여성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경찰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시절에 아주 강하고 일관되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주장이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는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대대적인 국가적인 수해가 있었습니다. 경남 산청, 경기, 충남 등에서 사망자 27명을 포함해서 스물아홉 분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7월에는 또 광명 소하동에서 필로티 화재로 사망 네 분 포함해서 65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남부권 호우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때 말씀하셨던 대통령이 재난의 컨트롤타워다 하는 말의 무게를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저희 행안부에서도 실천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는 각종 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재난에 대해서는 과하다 할 정도로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박수민 위원 제가 과거 이재명 대표 시절의 발언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재나 자연재해는 일상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니까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공무원 탓하려는 것은 아니고 지휘자의 몫이다’, ‘지휘자가 어디에 관심 있는지 공무원들은 예민하게 안다’. 2023년 7월 25일 발언이십니다.

세종시에서 23시간 동안 실종자가 있었는데 컨트롤타워 작동 안 했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휴가 가셨습니다. 경남 산청 아직도 피해 복구 중이고 무안에 폭우 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세종시에서 23시간 동안 희생자가 보고되지 않은 것은, 세종시장이 아마 귀 당으로도 설명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생자가 재해가 나기 이전에 다리를 건너다가 하천에 실족한 사건으로 재해 외로 분류했기 때문에 보고가 늦었

던 거고요.

○박수민 위원 경과를 들었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리고 지금 현재도 행안부와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재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대통령실 브리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종 시민을 23시간 동안 경찰과 소방 당국, 지자체 재난 지휘부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된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적절한 발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세종시로부터 아무런 재해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 경과를 파악했고……

○박수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현장 공무원들 질책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좋은데 대통령이 재난의 컨트롤타워면 대통령실의 책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셔야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현장 공무원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저는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국가재난에 대통령을 꼭 끌어들어서 정치 사건화하는 것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중앙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은 재난 상황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수민 위원 추상적인 무한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라고 말씀하셨으면 현장의 일선 공무원들 탓만 하지 마시고 대통령실은 그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 방기한 책임은 없는지, 최선을 다했지만 놓친 점이 있으면 성찰의 말을 하시든지, 그게 말의 일관성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재난에 의한 사고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고요.

○박수민 위원 재난 상황이었고 그것을, 특정 사건은 재난이 아니고 실종자 특정 실종자는 재난이고 어떻게 그렇게 그것이 편의적으로 형식 논리로 됩니까? 모든……

제가 다른 발언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그날 국가는 없었다’,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 줄 것이라는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다’고 전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멋진 말들, 국민을 위한 말 했으면 대통령실의 책임에 대해서도 사과하는 브리핑이 나와야 됩니다.

저도 1분만 더 하고 3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박정현 위원 반성부터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수민 위원 아니, 저는 동일한……

○위성곤 위원 대통령실이 뭘 잘못했어요?

○박정현 위원 뭘 잘못했는지……

○위성곤 위원 아니,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대통령실이?

○박수민 위원 아니,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거기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 서범수 위원 발언하는데 조용히 있습니다.
- 박수민 위원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 이달희 위원 말씀 중인데 왜 그러세요, 장관님께 묻는데.
- 서범수 위원 왜 이러세요, 장관한테 질문하는데.
- 위성곤 위원 동네에 나는 교통사고도 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돼요?
- 이달희 위원 장관한테 질문하잖아요.
- 서범수 위원 왜 개입합니까?
- 위성곤 위원 그런 얘기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 이성권 위원 아니, 동료 위원들한테 질문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냥……
- 위원장 신정훈 위성곤 위원님, 잠깐요. 잠깐, 질의……
- 박정현 위원 어느 정도여야지요.
- 위성곤 위원 상식적으로 질의를 하셔야지.
- 이달희 위원 정도는 국민들께서 아시지요.
- 박수민 위원 아니,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 위성곤 위원 참사에 대한 이야기와 같은……
- 박수민 위원 말의 일관성을 가지고 모든 무한 책임을 대통령실이 진다면 대통령실의 사과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게 모든 책임을 지기 위해서, 세종시에서 있었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게 호우에 의한 호우 피해자로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책임을 지기 위해서 물어보신 거고요. 그 경위를 파악을 해서 세종시와 또 행안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모든 경위를 공유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수민 위원 저는 둘 중의 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대통령실의 사과도 필요하고 아니면 더 이상 국민들의 안타까운 재난에 대해서 정치 사건으로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사과가 있든지 이것이 정치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부남 위원 경찰청장직무대행님.
-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 양부남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류희림 사건 아시지요?
-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 양부남 위원 류희림 씨가 민원사주를 했다고 해서 방심위 직원들이 류희림을 고발했고 그러자 류희림이 고발한 직원들을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 알고 계시지요?
-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 양부남 위원 PPT.
- (영상자료를 보며)
- 이게 수사 절차를 보면요 류희림이 고발당한 사건은 강제수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류희림이 고발한 사건은 수사관 40명이 동원돼서 온 동네방네를 다 압수수색했어요. 그리고 수사 결과는 류희림이 고발당한 사건은 무혐의처분했어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그리고 류희림이 고발한 사건은 전부 기소했습니다. 이 수사 절차를 보고 국민이 경찰을 신뢰한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

○양부남 위원 답 안 해도 돼요.

그다음 PPT. 그다음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무혐의됐어요. 무혐의 사유가 참 가관이에요.

첫째, 사주된 민원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위계로 볼 수 없다 했는데 위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업무방해에서 위계가 무슨 뜻이에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서 위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

○양부남 위원 위계라 하면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착각, 무지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한 거예요. 왜 이게 위계가 아닙니까? 내가 검사를 삼십여 년 동안 했지만 이런 논리는 처음 들어 봐요.

두 번째, 이 사주된 민원인들에 대해서 동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위계가 아니라는 데 동조했으면 공범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더 가관인 것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주된 민원과 긴급 안전 상정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인데 이 사건은 뉴스타파가 2022년 3월 6일 날 처음 보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년 6개월이 지나서 느닷없이 2023년에 과방위 예산결산 심사할 때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를 척결하라는 이 말이 떨어지니까 그 즉시 1시간도 안 돼서 민원이 300건이 제기됩니다. 그러고 나서 긴급 안전이 상정돼서 과징금이 부여됐는데 이게 인과관계가 안 된다니……

이걸 내가 사자성어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곡진아권(曲眞阿權)입니다. 진실을 비틀어서 권세에 아부한 거예요, 경찰이. 이러면 경찰 신뢰하겠어요? 이것 이의신청했으니까 다시 살펴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고발인의 수사 심의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살펴……

○양부남 위원 잘 살펴보시라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양부남 위원 이래 가지고는 경찰 신뢰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힘만 많이 가지면 뭐해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지. 이런 편파적인 수사하고 괴상한 법률안 만들어 내놓고 곡진아권, 내가 검사 삼십여 년 했지만 이런 법률안 처음 봐요.

그다음 총기 사건 좀 봅시다. PPT, 이 총기 사건에 보면 참 애달프게 피해자의 부인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현관문 열 수 있어요?’ 물어요, 현관문 열 수 있냐고. 이게 지금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그래서 피해자가 뭐라고 합니까? ‘현관 말고도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래요. 테라스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다음 봅시다. 그다음 PPT, 여기 보면 사고 발생 후 8분 만에 순찰자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순찰차가 도착하고 2분 후에 피의자는 도주를 해요. 그것 몰랐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 당시 경찰들이 몰랐습니다.

○양부남 위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은 33층 아파트, 고층이기 때문에 출입구를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순찰차가 도착해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은 경찰특공대가 45분에 도착해서 27분간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경찰특공대 도착해서 멍하니 있을 때 피의자는 도주했고 피해자는 죽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인천연수경찰서지, 그 경찰서의 상황관리관이 그 뒤에 도착해요. 지휘자가 없는 거예요, 지휘자가. 열빠진 거예요.

앞에 말한 류희림 사건에서 경찰은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강력범이 발생한 현장에서는 경찰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동을 하면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이것 현장에 나가 있던 상황관리관하고 경찰서장 징계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지금 감찰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인사조치 등 징계를 지금……

○양부남 위원 정확히 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사실관계가 나오면……

○양부남 위원 알았습니다, 정확히 하시고……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스토킹 범죄가 여러 번 발생하고 있는데 스토킹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스토킹범과 피해자를 격리하는 겁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격리에 가장 좋은 방법은 구속하는 겁니다. 구속영장 기각을……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도 1분만 쓰게 해 주십시오. 저는 30초면 얼마든지……

○위원장 신정훈 예, 계속해 주십시오.

○양부남 위원 행안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양부남 위원 저는 고향이,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인데 저의 지역구 문제가 아니라 제가 광주시당위원장으로 광주에 관한 문제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재난지역 선포가 있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양부남 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 자치구에서는 복구하고 동으로서는 광산구 어룡동이 일견 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에서는 이게 누락이 됐는데 2차에서는 잘 어루 살피셔서, 민생을 좀 살피셔서 두 군데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5월 2일까지 1차 종합조사가 끝났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내일 대통령님께 긴급……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드릴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에 대해서도 건의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양부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경찰청장직무대행께 인천 송도 총기 사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경찰은 뭐하고 있었던 겁니까?

총기를 맞은 사람이, 피해자 배우자가 22시 33분에 살려 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39분에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 보세요. ‘살려 주세요. 남편이 지금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요. 집 안에서 총을 들고 있어요. 신음 소리 내고 쓰러져 있다. 현관문 열 수 있다. 현관문 열라고, 안내할 수 있다. 지금 현관문 열었다. 남편이 현관에 누워 있다. 출혈이 있다. 문 앞에서 말해 달라. 현관문 열어 주겠다. 방 안에 있어서 밖의 상황은 모르겠다. 현관 말고 테라스로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까지 신고자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건이 난 70분이 지나서 경찰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위성곤 위원 이런 상황 판단은 어떻게 한 건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현장에 우선 지역경찰, 그리고 강력팀이 먼저 출동을 했는데 신고 내용과 현장 상황을 토대로 판단을 했을 때 가해자가 집안에서 사제총기를 장전하고 있는 것으로, 가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현장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배우자의 신고 내용을 가지고 분석해 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있었고 거기에 총을 맞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되면 관련되어진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 부분……

○위성곤 위원 그게 첫 번째.

앞서 양부남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CCTV도 확인 안 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안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앞서 얘기한 청장의 말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그냥 핑계에 불과한 것이라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위성곤 위원 이런 일들이 사실상 경찰들의 직무유기로, 해태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청장까지 져야 돼요, 직무대행까지도.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매뉴얼 개정이라든지 필요하다면 관련 장비 확충 그리고 또 교육훈련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매뉴얼은 있어요, 매뉴얼. 119신고 매뉴얼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코드제로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강이 빠진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 그런

총기 상황이 있어서 상황실에서는 현장의 지역경찰과……

○**위성곤 위원** 핑계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생소비쿠폰을 지급하니 국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소비쿠폰이 망국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들어 봤더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KB국민카드 가맹점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간,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조사에 의하면 전 주에 비해서 14.2%가 총매출이 증가한 걸로 나타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위성곤 위원** 실제 현장에 갔더니 저희 지역 주민들 너무 좋아하십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카드사에 따라서 20% 이상 소비가 늘어났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을 이어서, 이제 소비가 진작되고 늘어나고 있는데 이후에 또 다른 대책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책들도 마련해 주시고요.

1분만 주시면……

○**위원장 신정훈** 예.

○**서범수 위원** 아예 6분으로 하시지요.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또 7분 됩니다.

○**위성곤 위원** 사각지대 관련되어진 얘기인데요. 아마 신정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신안지역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섬 지역에서 소비쿠폰 쓰려면 배 타고 4시간 나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인 경우 30억 매출로 묶여 있어서 실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가 지금 다른 경쟁 마트가 없는 지역은, 121곳의 하나로마트가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이미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소비자들의 상당한 불편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요. 섬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농촌지역도 인구 소멸지역 이런 지역에서 경쟁 마트가 있더라도 품목이 부족해서 소비쿠폰 사용에 불편이 있는 지역들을 지금 전수조사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문제가 있는 지역은 하나로마트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요. 또 그다음에 농어민 직거래장터에 대해서도 사용을 허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입니다.

장관님,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일어나면 국가 시스템이 제일 먼저 작동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시급한 게 국민의 생명을 먼저 구하는 거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 두 번째가 일상생활이 회복되도록 긴급 복구하는 일들일 거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달희 위원 그다음이 저희들이 현장에서 겪어 보니까 배·보상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통상 일상 회복에서,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올 때, 이번에 뉴스에 보면 지붕만 남기고 다 잠긴 산청이나 예산이나 충청도 그리고 또 도심이 잠겼던 광주 이런 곳이 물난리를 겪었는데 그러면 이제 물이 빠지고 난 뒤에 상상이 가십니까? 바로 가보신 적 있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럼요.

○이달희 위원 그렇게 보면 거기에 가장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우선 예로부터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난 자리에서는 건질 게 있어도 물 들었던 자리에서는 건질 게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달희 위원 이번에 저희들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우리 당직자들이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가보니까 그냥 논 끝까지 다 잠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이 통상, 요즘 뭐 연세 많은 어른분들이 많고 또 젊은이들이 있다 해도 몇 명이 안 되는데 한 집에 한 방에 물 담긴 짐을 그 더운 여름철에 꺼내는 데만 해도, 오전에 버스 한 대가 가서 한 집 정리하는데 물건을 꺼내서 바깥에 길에 뒀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말리고요.

○이달희 위원 말리는 게 아니고 버리는 것도 골목까지 끌어내야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시급한 게 일손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

○이달희 위원 돈이 있다 한들 그 시골에서 청장년 같은 그런 힘들을 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달희 위원 그래서 우리 행안부 산하에 장관님께서 소통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해야 될 조직이 어떤 조직들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우선 자원봉사센터에서, 전국의 각 지자체의 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이달희 위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한 1400만 명 정도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렇게 지자체까지 다 돼 있고요. 거기에는 중복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단체 봉사하면서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거나 그리고 그걸 운용하는, 우리가 돈을 주면서 운용하는 재원들만 해도 한 2000명 가까이 사무국 직원들이 이 일을 위해서 상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관변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국민운동단체로서 새마을지도자회가 있고요. 또 바르게살

기운동, 자유총연맹 이런 국민운동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이번 수해 복구 작업에 자원봉사로 많이 참여를 했고요.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연인원, 지금까지 약 6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일손을 보태 주셨습니다.

○**이달희 위원** 새마을중앙회가 180만 명 정도 되고요. 자유총연맹이 80만 명, 바르게살기가 1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정권교체, 이번에 두 번째 재가 장관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기에 정권교체가 되면서 이런 단체들 소통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적극 지원도 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 단체를 이끄는 것 중에, 로타리도 해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봉사하면서 가장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단체장들이 또 장관님하고 함께 일하던 국회의원 출신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우리 흔히 얘기하는 3관변 국민단체랑 적극 소통하시고 활동을 더 적극 장려해서 이런 큰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는 온 국민이 한꺼번에 모여서, 지금 장관님께서 6만 명 가까이 다녀갔다고 하지만 정말 아직도 할 일들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리고 저도 1분만……

○**위원장 신정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달희 위원** 그리고 평소에 장관님께서 이런 단체, 특히 자원봉사센터도 매뉴얼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현장에서 점검해 보니까 잘되는 곳 있고 잘 안 되는 곳 있는데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되는 곳의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관변단체하고는 평소 소통도 잘 하시고 적극 지원도 좀 하셔서 어려움이 있을 때 국민들이 다 모여서, 거의 260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 재난을 극복한다면 국민통합과 화합에 얼마나 큰 모멘텀이 되겠습니까? 장관님께서 적극 이런 단체와 소통해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 수재 이후에 3단체와 또 재난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청이 관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도 있습니다. 이 모든 봉사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해 복구 작업에 힘을 모아 달라요 요청을 일일이 다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달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들도 보니까 이런 공문을 통해서, 날짜도 빨리 보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난 뒤에 적극적이고 잘했던 팀들에 대해서는 상도 좀 주시고 이런 단체들이 정말 봉사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잘 지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도 적극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나라가 선진화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3월 영남권 대형 산불 이후에 산불 진화 대응체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아직 결론을 내리진 못했고요. 재난 관리 차원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고 또 국정과제 차원에서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춘생 위원 최근에 입법조사처에서도 보고서를 발간한 거 보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정춘생 위원 거기 보면 핵심 내용이 예방은 산림청, 대피는 지자체 그리고 복구는 행안부와 산림청이 주관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진화는 소방청으로 일원화해서 지휘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일단 저희 논의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떤 방안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소방청에서는 산불이 나는 경우 산불 진화보다는 지금까지는 인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작업에 집중을 해 왔습니다만, 입산해서 직접 산불을 진화하는 데도 특별조직을 만들어서 투입하기로 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산불을 어떻게 진화하고 효율적으로 역할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형 산불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이제는 마련이 돼야 된다, 그런 고민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최근 산불이 나면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최근에 대형 산불이 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석 내용에 따르면 강풍과 그다음에 산림이 매우 건조해지는 원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종이나 산림 관리, 간벌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잘 안 돼서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 결과들이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풍이 불 수도 있고 건조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 비슷한 지형이라면 다 같이 겪고 있는 데고요. 어떤 데는 대형 산불로 안 번지고 어떤 데는 대형 산불로 가더라, 그런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자료들을 좀 봤는데요. 2022년 울진·삼척 그리고 2019년, 2020년 이어진 고성·의령 대형 산불 그리고 2023년 강릉·홍성 그리고 최근 의성과 산청 영남권에서 발생한 산불 등 대형 산불 현장의 공통점은 모두 소나무 우점림에서 간벌과 숲가꾸기 사업이 있었던 지역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런 분석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고성 산불 지역의 한 야산입니다. 오른쪽 구역은 새카맣게 탔지만 왼쪽은 전혀 타지 않았습니다. 같은 산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오른쪽은 활엽수를 다 제거하고 소나무로 숲가꾸기를 한 구간입니다. 왼쪽은 숲가꾸기를 하지 않아서 활엽수가 남아 있는 구간입니다. 아시겠지만 활엽수들은 잎과 가지에 수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불이 잘 붙지 않고 오히려 산불이 나면 방화선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구간 침엽수는 휘발성 기름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수분 함량이 매우 낮아서 불이 붙으면 수관화, 들어 보셨지요? 수관화 현상 때문에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올해 산청 산불이 났을 때 지리산 국립공원의 내부와 외부의 산불 피해 정도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전체 산불 피해 면적 보시면 내부의 비중은 4.9% 그리고 외부의 비중이 95%를 차지합니다. 피해 강도가 높은 지역도 대부분이 국립공원 외부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

○정춘생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내부·외부를 보면 내부에는 전혀 간벌과 임도 없고요, 외부에서 산불 피해가 많은 데는 그 지역은 대부분 98%가 소나무 등 침엽수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불이 발생하면 진압 후 타 버린 나무를 벌목한 뒤 다시 화재에 취약한 침엽수인 소나무를 심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예산도 매해 이삼천 억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보면 1조 5000억 정도 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산림 정책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지금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산림의 원인을 분석하고 산림 관리 방식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춘생 위원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비교표입니다.

일본의 산불 피해 면적은 연평균 735ha지만 우리나라는 연평균 4003ha, 일본의 다섯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산림 전체 크기를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4배나 됩니다. 그걸 계산을 하면 우리나라의 피해 면적은 일본의 21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조림이나 숲가꾸기 등 인위적인 개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개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런 대형 산불의 피해로 이

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산림 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우리 행안부장관계서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컨트롤타워의 기능·역할·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이 부분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피해 난 지역을 다시 다 벌목하고 침엽수 심고 거기에 불이 나면 또 대형 산불로 번지고, 해마다 반복하는 걸 이제는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장관님,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서 인권 유린과 또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짧게 그냥 답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묻고.....

○**이성권 위원**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다음에 그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이성권 위원** 알겠습니다. 사과 그리고 진상규명, 명예 회복, 피해보상 이런 내용들이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PPT 한번 보시면 거기에 관해서는 과거사 정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과거의 국가 주도 폭력과 인권 침해 사례들인데 집단수용시설 대부분 다 들어 보신 내용이지요? PPT 보시면,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성권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경기도에 있었던 집단수용시설의 사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선감학원.....

○**이성권 위원** 선감학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후보자 시절에 피해자분들께 사과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법무부의 항소나 상고 취하에 대해서 취하 요청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래서 그런지 그다음 PPT를 보시면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만 바로 2주 뒤에 대통령실에서 상고 취하와 정부 차원 사과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저도 사실 선감학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 있는 용혜인 의원 또 이재강 의원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토론회도 개최했고 법안도 같이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환영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일관성에 있어서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아까 그 표에 보면 부산에 관련된 집단수용시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았다 생각하는데 형제복지원, 재생원 그리고 덕성원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복지원도 마찬가지로 국가 대상으로 배상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어떤 언론에서는 정부가—법무부장관의 발언입니다—상고를 하겠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취하를 하겠다 이렇게 갈 지(之) 자의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 알고 계신지, 장관님은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 입장은 이렇게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이기는 합니 다만 정부의 사과와 또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배상 사건에 대해서는 상고를 취하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성권 위원** 다음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말씀하시는 영화숙이라든가 재생원……

○**이성권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또 덕성원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이성권 위원** 다음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대법원 판결이 벌써 난 건이, 확정이 난 게 6건이나 있습니다. 이게 다 인권유린이 있었고 피해보상이 돼야 된다는 판결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선감학원하고 똑같이 적용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항소 내지 상고를 취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일관성 차원에서, 이게 행안부뿐만 아니고 법무부와 대통령실에도 충분히 공유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여기 보면 아까 장관님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화숙이나 재생원과 같은 이것도 똑같이 1960년대와 70년대에 강제 노역, 구금, 폭행, 성 착취, 인권침해가 이루어졌던 집단수용시설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피해회복 그리고 장기적인 치유, 진실규명, 구제와 배상 이런 것들을 다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그래서 이에 맞춰 가지고 제가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임위로 가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미야 상태로 가 있습니다.

왜 미야 상태로 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담당하는 소관 부처가 정해져야 되는데 행안부는……

죄송합니다. 시간 끝나기 전에 위원장님, 미리 제가 1분만 더 쓰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

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이성권 위원 행안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하면, 보건복지부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과거사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안 소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양 부처가 핑퐁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숙과 재생원 관련된 것도 정부의 국가권력에 의해서 인권침해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조치가 있어야지 사후적으로 뭐가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님, 지금 이 질의에 대한 행안부의 답변은 언제 있었던 것입니까?

○이성권 위원 이게 날짜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법안 제출을 7월 달……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장관이 된 뒤에……

○이성권 위원 아닙니다. 장관이 되기 전일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마 그 이전 기준으로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명백히 과거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 부분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3차 진실·화해위원회법이 지금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 진실·화해위원회를 가동해서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성권 위원 행안부가 어쨌든, 진실·화해위원회가 2기 때 이미 권고한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맞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행 점검이나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를 명확하게 빨리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명확히 저희 소관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마치셨습니까?

○이성권 위원 예, 마쳤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의 이광희입니다.

행안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두 차례 추경에 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큼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배분된 것 보면 정부 1추경 때 국비가 2%, 지방비가 5%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 중에서 1차 추경이 되기 전에 이미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기예산이 들어간 지자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광희 위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1추경 때 2% 국비밖에 안 들어갔다가 정부 2추경 때 8% 이렇게 들어가니까, 지방비는 5%로 그대로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잘 활용해 왔던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비용을 충당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추경 심사과정에 1차 추경에서는 국비 지원율을 일반 지자체는 2% 또 인구감소지역은 5% 지원을 했고요. 2차 추경에서는 불교부단체를 2%, 그다음에 수도권 5%, 비수도권 8% 또 인구감소지역은 10%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그 예산편성된 방식대로 집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광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1월부터 4월까지 발행했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가 들어간 것에 대한 지원 계획은 없으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온 지자체에 대해 평가를 해서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예산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방안 모색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광희 위원 그다음에 경찰청에 여쭙겠습니다.

아까 류희림 민원사주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민원을 신청하게 해서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익신고자 색출 목적의 감사를 진행한 사건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광희 위원 아까 질문을 해서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실에서, 감사실에 통보한 거 보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의 처분을 소속기관에 통보를 하고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이러면 류희림 전 위원장 과실이 맞는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업무방해 혐의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업무방해는 저희 수사팀에서 여러 가지 법리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린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광희 위원 외압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제가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경찰 고유 판단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수사팀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 근거가 뭐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타인의 요청에 의해 접수된 민원이라도 방심위의 내부 규정상 민원 주체나 접수 경로 등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다른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본 사안은 류희림 위원장의, 전임 위원장이 직권 상정한……

○**이광희 위원** 오히려…… 청장님, 고발인 입장에서 보면 직원 3명이 송치되고 7명이 불송치됐어요. 그런데 정작 고발인은 그렇게 되고 피고발인은 이렇게 해서 혐의 없음이 되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 고발인 부분은 다른 팀에서 수사를 했는데 고발인 부분은……

○**이광희 위원** 다른 팀……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아니, 다른 팀이라기보다는 개인정보를 기자들한테 유출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 사건만 보면 결과적으로 공익신고자임에도 송치를 함으로써 방심위의 언론 장악 시도에 경찰이 동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권익위에 공익신고 한 부분은 저희가 공익신고자로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광희 위원** 의심받지 마시고요. 경찰이 언론 장악 시도에 동조한 것이라고 의심받을 만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고발인 측에서 심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용인갑 이상식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경찰이 동네북 신세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자조 섞인 그걸로 많이 하고 했는데 오늘도 많은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게 있으면 질타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대행님, 조금 억울한 부분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가 일을 해 주게 만들어 놓고 경찰을 비난하는 것은 팬찮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제도적인 권한을 다 부여하지 않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 사건 때 보니까 112센터 직원이 ‘현관문 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과거에 현관문 잠겨 있는데 우리가 부수고 들어갈 때, 경찰이 옛날에 손해배상책임 지고 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상식 위원** 지금 그거 개선됐지요? 지금 개선됐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됐습니다.

○**이상식 위원** 옛날에 또 112 순찰차가 아픈 환자, 다친 환자 데리고 병원 응급실에 가면 그 응급실에 대한 치료비 보증을 경찰관이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상식 위원 지금은 그거 개선됐습니까? 개선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상식 위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권력이 아닌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한번 이 사건을 제가 들여다봤는데 특히 데이트 교제폭력 같은 경우에 이게 문제가 많은 것이…… 경찰에서 잠정조치를 그때 신청을 했지요? 그렇지요,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 분리하고 하기 위해서?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상식 위원 그런데 검찰에서 그것을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사태가 났다. 그래서 경찰이 좀 억울하게도 다른 기관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을 뒤집어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런 부분도 위원님 부분에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있지요?

그래서 잠정조치 같은 경우에 지금 기왕에 수사권이, 기소·수사가 분리돼 가지고 경찰이 이제 온전한 수사 주체로 거듭나야 되는 이런 마당에, 영장청구권은 어쩔 수 없이 헌법상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잠정조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긴급성과 응급성이 대단히 필요한 그런 조치인데 이것까지 검사를 굳이 경유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잠정조치의 주요 내용들이 중요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법관이 판단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청구를 경찰이 하면 되지 검사까지 꼭 거쳐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최근에는 학계에서나 또는 경찰에서도 여기에 대해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 어떻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성 범죄는 신속하게 격리조치가 필요한데 신속하게 격리조치를 하려면 경찰에서 바로 법원으로 잠정조치라든지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식 위원 이게 권력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경찰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인데 그래서 그런 권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법 요청을 하시면 국회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식 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시대적인 화두가 검찰개혁인데요. 경찰은 사실 보면 그 반사적인 이익으로 권력이 굉장히, 경찰권이 비대해진다 하는 이런 우려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상식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도 수사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는 받아들

이겠단 이런 입장인 걸로……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당연히……

○이상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과거에 이만저만한 수사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들이 보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이제 준법 감시관이든 아니면 인권보호관이든 제대로 된 국민 인권 보호 기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 한 두 가지가 하나는 외부에서 참여를 해야 되고, 그렇지요?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참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의 기속력은 필요하다, 단순히 권고적인 효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도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런 부분 국민들께서 저희 경찰이 그러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국수분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 지금도 물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이 많이 마련돼 있지만 외부의 그런 민주적 통제 이런 부분을 추가로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국세청에 납세자보호관 이런 제도가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것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장관님한테 한 1분만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예.

○이상식 위원 장관님,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중수청의 소속 문제가 굉장히 관심사인데 장관님한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진 않지만요, 안 할 수도 있고 한테 제가 보기에 중대범죄수사청 저것을 법무부에 두게 되면 기소청하고 정서적인 유대관계도 있기 때문에 담합이나 결탁 이런 게 우려가 돼서 어떤 분들은 과거의 검찰 중수부를 오히려 중수청으로 승격시킨 거나 다름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거든요.

물론 장관님 휘하에 들어오게 되면 제가 보기에 권한보다는 책임이 무거워질 텐데 장관님,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장관님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되면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행안부로 오게 되면 행안부 소속은 될 수 있지만 수사에 관한 직접적인 지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함으로써 국가경찰위원회가 하게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장님,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던 것에 대해서 약간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위원장대리 윤건영 예, 짧게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신, 영화속·재생원 또 형제

복지원, 부산 덕성원 사건에 대한 소관 문제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당연히 행안부가 소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형제복지원과 부산 덕성원 사건에 대해서 진화위가 소관, 그러니까 국가 사과 및 피해 회복 지원 권고 주관기관을 복지부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에서 관여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영화숙과 재생원 사건에 대해서도 인권침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실규명 결정을 했는데 지난 2월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주관기관 지정을 어디로 할 것인가 아직 결정을 못 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유재성 직무대행께……

이번에 총기사고 피의자, 유튜브에서 사제총기 제작했다고 진술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사제총기를 제작해서 범행을 했습니다.

○고동진 위원 제가 경찰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사제총기 영상을 경찰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방통위원회에 삭제나 차단 요청을 하고 그리고 방통위는 구글코리아에 요청해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리고 또 경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동영상 플랫폼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총포화약시스템 내에 인공지능 기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불법영상 탐지부터 방심위 삭제·차단 요청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고동진 위원 그것에 따라서 경찰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내년 예산 9억 원을 편성하고 개발을 해서 2027년에 시행하겠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맞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의혹을 가지시고 이런 계획을 가지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오늘 아침에 구글코리아하고 전화를 해 봤어요.

구글코리아에서는 애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파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단계에서 총기 제작이나 총알 제작 이런 유해 콘텐츠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걸러지게 해 가지고 아예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게 원칙이고 두 번째, 올라가더라도 거의 조회수가 10회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삭제하도록 하는 게 정책입니다, 구글에서.

그래서 실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10건 이상 올라가는 것은 거의 다 삭제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SBS 보도에서 인천의 총기사고가 이런 동영상을 보고 했는데 그게 사실 구글이 아니었고 레딧(Reddit)이라고 하는 또 다른 SNS 사이트였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경찰청에서 예산 9억 들여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게 급한 게 아니고 구글코리아라든가 오히려 이런 데하고 MOU를 맺어서 가지고 구글코리아 정책을 확실하게 구글이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데도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좀 짚어 보시고 그것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아이디어를 들이는 거지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 봐 주시기를 바라고……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필요하면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실무자들에게 해서 관련 구글코리아, 유사한 데 이렇게 콘택트를 한번 해 보라 그러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행안부장관께 여쭙보겠습니다.

지난 7월 중순에 집중호우로 많은 분들이 사망을 했어요. 어제 아침까지 해서 29명 사망·실종을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수해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저 또한 드립니다.

집중호우 피해지역 상황이 참 참담하기 그지없고 특히 전남 지역의 경우에 지난 주말에 또다시 이렇게 기습적인 폭우가 내려 가지고 추가 피해도 많이 걱정은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과 우리 국군장병들 그다음에 여야 의원님들 모두 복구 작업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수해의 아픔은 나 몰라라 하면서 물놀이 축제를 강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저희도 그 보도를 접하고 어떤 축제인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지자체에서도……

○**고동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난번에 산불 났을 때는 모든 지자체가 이런 축제 같은 것 다 연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함평인데 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강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함평군은 지난 8월 1일에 전국시도지사간담회에서 전남도지사가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요청하고 국비 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었어요.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평군은 물놀이 페스타 축제를 중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고동진 위원** 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어제부터 중단했습니다.

○**고동진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장관께서 이것은 지자체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방관할 게 아니고 수해에 직접적으로 피해 입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행안부가 축제를 취소하거나 연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뉴얼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특별한 매뉴얼은 없습니다만 국민 여러분들의 시선과 또 감정을 잘 살펴서 그렇게 권고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행안부는 재난안전의 주무부처이자 지방자치단체하고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하면 매뉴얼도 좀 만드시고 해서 국민들이 그런 것을 보시고서 허탈감을 느끼거나 또 다른 상처를 받는 일은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위원장대리 윤건영 고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직무대행……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되시고 첫 지시가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해식 위원 서면으로……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첫 지시가 되게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해식 위원 지난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김봉식·윤승영·목현태 이 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가담자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있습니까? 감찰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결과를 보고 감찰해서 면밀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감찰을 안 했기 때문에 징계도 없겠네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해식 위원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83조를 보면 수사 개시된 공무원에 대해서 감찰이나 또는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마땅히 안 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해식 위원 그냥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조사도 할 수 있고 감찰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면 12·3 계엄, 그런 내란 상황에서 경찰은 일부가 가담했다라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외에, 지금 고발만 65명이 됐어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해식 위원 그렇다면 차장으로 새로 임명되셨으니까 자체적으로 새로 감찰하고 또 징계할 사람 징계하고 과단성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해식 위원 그리고 류희립 전 방심위원장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양천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경찰이 고발에 의해서 수사 개시를 했고 또 결국 무혐의 처분을 한다는 것은 불송치결정을 한 것인데,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면 수사가 종결된 거란 말이에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해식 위원 그러면 수사도 시작하고 수사도 종결하고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해식 위원 수사를 직접 개시한 검사가 역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 편파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봐주기 수사가 있을 수 있고 과잉수사가 있을 수 있다 그것 아닙니까? 경찰도 똑같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저희가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지만 불송치결정을 하면 검찰에 가서……

○이해식 위원 물론 재수사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검찰에……

○이해식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종결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혐의 처분을 했잖아요. 방심위원장 이 건이 얼마나 중요한 건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국민적 관심이 있는 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래서 만일에 이것이 정말 편파적인 수사고 봐주기 수사라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수사한 직원들부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식 위원 아니, 책임이 있는데 그러면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물을 거냐라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해식 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이고 국민적 관심사가 지대한 건인데, 국수본에서 아마 보고가 됐을 것 같은데……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해식 위원 국수본부장이나 다 검토를 하고 내린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국수본에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알겠습니다.

장관님께……

시간이 없어서 1분만 조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비가 와서 홍수가 났는데 또 이렇게 한 일이 주 만에, 특히 어제 보니까 광주 북구인가요 다시 물에 잠겼는데 지금 재난이 일상화되

는 그런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에 대한 상황조사를 하고 그 상황의 어떤 경중을 따져 가지고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복구 계획 세워서 보상하고 그러면 그냥 끝나 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조사를 하고 또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복구 계획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원인조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9조에 보면 재난원인조사를 시군구청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가능하면 합동조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정부하고.

그래서 재난원인조사를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한번 장관님께서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없는지 이것을 좀 강구해 주시고 그것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승 위원 경기 화성병 권철승입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인천 사제총기 살인사건 관련해서 사건 발생 72분 이후에 경찰특공대가 현장에 투입되었는데요. 좀 늦은 것도 문제지만 범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게 경찰특공대가 들어가고 나서 알았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권철승 위원 저는 이게 현장 대응 능력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 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른 방식으로 알아볼 노력을 안 하신 건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저희가 그 현장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신고 내용과 현장 상황의 일부만을 판단해서 한 건데……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검거를 했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권철승 위원 그 사이에 2차, 3차 다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컸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권철승 위원 그래서 이것은 현장 대응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직무대행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 현장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감찰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감찰도 있는데요, 이런 긴박한 현장에 대한 어떤 사전 훈련이나 프로그램 같은 게 전혀 교육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저희가……

○권철승 위원 또 이야기드릴게요.

사건 발생 후에 98분이 지나서 위치추적을 지시하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권철승 위원 그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이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권철승 위원 그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서 한 것 맞습니까? 위치추적 할 때 이 시행령에 근거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런데 이게 현행법의 경우에도 지금 법상 위치추적은 불가능한 건가요, 원천적으로?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

○권철승 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범인이 자살 위험이 있는데, 자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자살 위험자는 위치추적이 가능합니다.

○권철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간주를 해 가지고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치추적 가능하다, 이런 논리로 이 범죄자에 대해서 위치추적 한 것 맞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현재 위치추적법상에 이렇게, 뭐 그렇습니다.

○권철승 위원 저는 이 규정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정말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이야기해 주……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현행법이 탈출을 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위치추적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것은 사실은……

○권철승 위원 아니,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건 영장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현행법은……

○권철승 위원 현행법이 영장이 어디 있어요, 당장?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저희가 영장을 받아서 위치추적을 합니다.

○권철승 위원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망가는데도 영장 받으러 가야 되는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

○권철승 위원 아니, 그것 제가 사실관계를 물어봅니다, 잘못됐다 이런 것을 떠나서.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긴급하게 조치가 가능하고요 사후에 영장을 받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면 왜 안 했는데요, 이 사람은?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하네요. 당연히 했었어야지요. 총 들고 지금 바깥으로 나갔는데 위치추적을…… 이 사람이 요구조자다, 생명·신체에 뚜렷한 위협을 스스로 가할 위험이 있다 이래 가지고 위치추적 했다면

서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위치추적법상에 그……

○**권철승 위원** 아니, 위치추적법상이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 그것 물어보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하여튼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하시네요. 이것 긴급하게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면서요?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다음 PPT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상황의 무전 내용인데요. 무전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고자한테 시아버지 나이가 몇 살인지, 피해자 남편이 몇 살인지 뭐 이런 것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하는 사람이 좀 답답했겠지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제총 들고 거실에서 대기하잖아요. 특공대 빨리 보내 주십시오’, 이게 지금 현실에서 경찰들이 할 대화입니까, 이게?

그다음에 ‘신고자가 밖의 아버지와 얘기를 해서 남편만 구조 조치를 먼저 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밖에 총 들고 사람 죽여 놔는데 며느리가 나가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해 가지고 뭐 협상을 하라 이 말이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현실에서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1분만 좀 더……

이게 정말 현실인지 진짜 현타가 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면 방이 있는데 신고자가 ‘숨어 있습니다. 시아버지 무서워서 대화를 못 할 것 같아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 저런 것을 묻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뭐 누구를 탓하자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에 대한 연습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육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다음에 장관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금 대상에 이번에…… 작년 3월 달에 보면 난민인정자 안 주는 것에 대해서 위험이라고 판결이 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포함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고려인이나 조선족들처럼 와서 장기 체류하고 세금도 다 내시는 분, 이분들이 지금 대통령실이나 인권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인들한테도 줘야 된다 이런 진정을 접수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장기 체류자라고 해서 모두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주민등록상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거나 재외동포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권철승 위원 건강보험 문제도 있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건강보험 가입자여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권철승 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너무 그렇게 행정적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 재판 판결 취지도 그렇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과거에 경기도에서 지급할 때 범위를 좀 확대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관님이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이 정책의 취지가 좀 더 살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권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장관님, 의정부·울산·대전·서울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친밀관계 살인과 살인미수 사건만 4건이 발생을 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제가 이 친밀관계 폭력에 대해서 경찰청 차장이 아니라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의 정책 수립에 대한 지휘 권한이 있는 부처가 행안부이기 때문이고요. 또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범부처 간의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에 장관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생했던 의정부 사건과 울산 사건 모두가 경찰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아무리 전자발찌를 채우겠다, 빠르게 구속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해도 결국에는 검찰과 법무부가 미온적이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무부와 행안부 그리고 여가부까지 관계 있는 부처들이 다 모여서 왜 반복되는지를 돌아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을 해야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반복되는 상황을 끊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경찰청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검찰개혁의 전문성을 갖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오신 장관님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책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에 대해서 토론을 함께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용혜인 위원 사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국민들께서 평가하고 있으시고 새롭게 바뀐 정부는 정말 다르구나라고 하는 효용성을 많이 느끼게 했던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산업재해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게 교제폭력, 스토킹, 가정폭력입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폭력들이 산업재해만큼이나 목숨을 많이 앗아 가

고 있는데요. 2023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855명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 친밀관계 살인 및 살인미수의 피해자가 전체 말고요 언론에 보도된 것만 568명입니다.

다가오는 국무회의에서 이 친밀관계 살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범부처 합동기구를 구성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용혜인 위원님 제안해 주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리고 여가부, 법무부 또 경찰청과 함께……

○**용혜인 위원** 검찰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검찰 포함해서 교제폭력,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그런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대통령께서도 사실 이번 살인사건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하신 만큼 장관께서 직접 대통령께 의지를 갖고 건의해 주시면 조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피해 지원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이 붕괴된 이재민들이 머무르고 있는 임시주거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재해구호법상 행안부는 지자체에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또 그 계획을 점검할 의무가 행안부에 있는데요. 이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은 재해 위험이 높은 시설을 임시주거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재해를 피해서 온 이주민들이 또 다른 재해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행안부 차원에서 점검이 됐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 점검을 해 가고 있고요. 특히 일부 지역에서 피난시설, 임시주거시설이 지하에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의 시설이 침수 또는 주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예, 맞습니다. 그 침수 피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충북의 일부 학교는 지하는 아니지만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주거시설로 지정이 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을 따로 또 해봤는데 올해도 반복적으로 수해를 입었던 일부 시설들이 여전히 임시주거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해의 피해를 피해서 임시주거시설로 온 이주민들이 또 다른 수해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윤건영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저는 행안부가 각 지자체에 신속하게 임시주거시설의 재난 피해 여부를 전수조사 하라고 지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재난 피해가 발생한 시설의 경우에는 즉각 지정 취소하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시주거시설뿐만 아니라 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곳도 침수 우려가 되는 시설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조사 결과와 조치 사항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장관님, 이상민 전 장관이 지난 8월 1일 구속이 됐습니다. 내란 공범이라는 혐의였고요. 불법 계엄 방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또 계엄 당일 날 CCTV, 계엄 문건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이런 보도가 또 있었고요.

그런데 구속의 핵심 사유가 증거인멸이었습니다,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였고. 그런데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아마 장관님이 이것 살펴보실 문제인데 불법 계엄 닷새 후에, 12월 3일 이후 12월 8일 날 이상민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민간인이었지요.

그런데 민간인 신분인데도 행안부 직원들과 계엄 관련 자료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도 나왔고요. 자신의 동선과 관련된 일정 자료 등을 요청해서 받았고 또 특검의 주장에 따르면 유리한 증거를 모으고 불리한 증거를 막으려고 한 것 아니냐, 이 자체가 증거인멸이라는 입장입니다.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내란 공범이고 전직 장관이고 민간인 신분인데 정부조직, 본인이 몸담았던 정부조직을 압박해 가지고 수사를 방해하고 더 나아가 증거 인멸을 했다는 거는 이걸 자체적으로 장관님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내부 감찰,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내부 감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해당 사안은 감찰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닌데요. 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그동안의 각종 불법과 유착에 대한 추가 의혹들이 또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취입 이후에 이 문제도 좀 살펴보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살펴보았습니다.

○**채현일 위원** 혹시 청사관리본부로부터 조사 보고 같은 거 받으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채현일 위원** 어떠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통령실이 청사…… 원래 대통령실은 행안부에 청사 관리를, 청사관리본부에서 관할을 하지 않고요 직접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청사 그러니까 행안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래서 아마 장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실을 설치했다는 실체적 정황이 나왔고 도면도 공개가 됐고요. 또 한남동 관저에 사우나는 물론 스크린골프장까지 설치됐다는 게 경호처 간부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모든 의혹들이 사실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시공을 맡은 데가 현대건설이라는 데고 무상 시공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고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에 기자회견도 나왔지만 10조 원이 넘게 투입되는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그 건설사가 국책사업을 받았다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건설사가 탄핵 이후에 가덕도 공사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는 해당 건설사와 경호처 간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는 것 때문에 미리 선수를 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국정농단으로 파면된 이 정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행안부가 방조했다, 책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장관님께서 청사관리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나 감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진상규명도 해야 되고 특검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체 조사하고 개선책, 그래야지만 행안부가 국민의 중추기관으로서 또 거듭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이 어떠신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서범수 위원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7월 수해로 인해서 1차로 경기 가평이나 산청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범수 위원** 그리고 아까 장관님께서도 2차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언제쯤 하신다 그러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내일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서범수 위원** 인색하게 하시지 말고 좀 넉넉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피해를 발굴해서……

○**서범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관련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일차적인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이차적인 어떤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 지자체든지 행안부든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2차 피해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고 보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범수 위원**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도 지난번 300mm 정도가 와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는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상수도 송수로관 파손으로

인해서 단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단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 통보도 없었고 또 송수로 파손에 대해서 찾지를 못해서 처음에는 하루 정도 있으면 되겠지 싶었는데 짧게는 3일, 길게는 5일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도 불편해하셨지만 특히 식당이나 중소상인 같은 경우에는 사전 통보도 없었고 준비할 여가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제 이거 복구됩니다’ 하는 이야기도 없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심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나 이런 데서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합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2차 피해, 특히 소상공인 피해까지는 저희가 지금까지 실시를 해 오지를 않았는데요. 지난 5월 달에 소상공인 지원법인가요, 개정이 되면서 그 피해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생긴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자체 간에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상수도 업무 자체는 시의 업무란 말입니다. 시의 업무여서 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3만 5000세대, 한 7만 명 정도가 거기 사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행안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소상공인이나 상인,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소상공인이나 식당업을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 게 안 맞느냐 생각하는데……

아마 울주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행안부나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지난번에 보면 시군구에 대한 특별재난지역만 선포하다가 이제는 읍면동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범수 위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재난특별교부세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십사, 장관님께서 행정안전부를 행복안전부로 만드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범수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좀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너무 규정에 얽매일 거는 아닌 것 같다. 좀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를 입은 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주십사, 그게 정부의 역할이고 국가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다고 해서 재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재난 피해에 대해서는 그대로 똑같이 보상이 이루어지고요. 그 외에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더 주어질 뿐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1차 피해 2차 피해 딱 나눠서 전체적으로 이걸 구분을 하는데 피해를 당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이 어렵게 피해를 입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번 지자체하고도 협조를 잘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1분만, 조금만 더……

○위원장 신정훈 예.

○서범수 위원 경찰청 차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서범수 위원 오늘 많이 질타를 당하셨는데요, 총기 사고 관련해서. 예를 들면 총기 사고라든지 큰 대형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경찰에서 조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차장님은?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우선 중요 사건이 나면 그 현장에 지휘관이 나가서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하고 지휘하는 게 중요……

○서범수 위원 그렇지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지휘관이 과연 현장에 임장을 해서 지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안 따지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112 신고 접수 이후부터 사건 종료까지 경찰서 상황관리관, 담당 과장, 서장의 동선 그리고 조치 사항. 그다음에 지방청, 지방청장, 상황관리관, 담당 과장의 동선, 조치 사항, 접수부터 종료까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 전북 익산의 한병도 위원입니다.

저는 소하천 관련한 거하고 그리고 한국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소하천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 규모가 2792억 원이라고 합니다. 관리 대상 2만여 개소 중에 5000개 이상이 소하천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아주 빈발하고 있고요. 소하천 정비는 개별 지자체에서 여전히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지역 간 정비 수준의 격차가 또 빈익빈 부익부로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3년간 시도별 피해의 통계를 보면 충남, 경북, 강원, 전북 정비율이 아주 낮고 재정이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전북은 27.1, 강원은 29%, 경북은 31, 충남은 36.8% 수준인데 광역단체 중에 모두 다 최하위권입니다. 또 피해 시군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로 재정자립도가 10% 내외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비예산 확보 자체가 구조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원래 국고보조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기초지자체로 이양이 됐는데 문제는 국고보조가 한시적으로만 유지되고 중장기 계획 없이 종료를 지금 앞두고 있다는 것이 현재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소하천 정비율이 낮고 피해가 반복되고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차등 보조라든지 또 특별교부세 가산이라든지 아니면 국고 직접 집행 등 중앙정부의 실질적 지원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이전까지는, 2019년까지는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이었다가 이것이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당시에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면서 그 대신에 지방 이양을 했는데요. 이후에 점차 예산편성이 줄어들어서 지자체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었고 전국적으로 다 취합을 해 봐도 이양 당시보다 줄어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특교세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지원을 해서 소하천 정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병도 위원** 예,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한병도 위원** 그리고 최근에 폭우, 산불, 폭염 등 기후재난이 동시에 전국에서 발생해서 피해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행정 영역만의 대응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실이고 저는 좀 더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컨트롤타워가 현재 없습니다. 기술개발은 과기정통부에서 하고 있고요. 산업화는 산업부, 인증은 행안부, 또 인재 양성은 교육부 등으로 이렇게 분절돼 있어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제정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도 실질적인 산업 육성은 지체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법은 있는데 진흥 기능을 전담할 조직이 없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진흥 기능을 집약할 전문기관, 한국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재난안전산업진흥원 같은 조직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 진흥원이 설립되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도 성장을 하고요. 또 청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특히 최근에는 재난관리 또 재난안전에도 AI 같은……

○**한병도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첨단기술의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R&D 수요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구로율의 윤건영입니다.

경찰청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사제총기 사건 관련해서, 상황관리관이 현장에 몇 시에 도착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70분 정도 아까 소요된 걸로……

○**윤건영 위원** 몇 시에 도착했는지……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22시 43분입니다.

○윤건영 위원 22시 43분?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윤건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뭔가 하면 경찰에서 작성한 상황보고서입니다. 이 상황보고서에 의하면 ‘21시 36분 상황관리관 현장 지휘’ 이렇게 나옵니다.

알고 계세요, 차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거는 상황실에 입장해서 지휘한 걸로 그렇게……

○윤건영 위원 아니, 상황관리관이 현장 지휘했다라는 게 21시 36분이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현장을 지휘했다라는 것은 현장에 가서 장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무실에 앉아서 무전 대기했다라는 것을 현장 지휘라고 합니까, 차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표현이 조금 그랬던 거 같습니다.

○윤건영 위원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사제총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경찰에서 매뉴얼대로 전혀 하지 않았습시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단 하나의 매뉴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니, 상황관리관이 현장에서 지휘하지도 않았는데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현장 지휘라고 상황보고서에 문건만 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차장님께서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서 매뉴얼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하나하나 처음부터 꼼꼼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좋습니다.

장관님께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좀 여쭙보겠습니다.

우선 소비쿠폰 관련해서 아까 장관님께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미진한 부분과 관련해서, 해외에 일시적으로 나가 계시는 우리 국적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한국으로 다시 오지 않으면 사용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 한번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잠시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 계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윤건영 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앞서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윤건영 위원 그런데 국회에 나와서 또 거짓으로 해명하고 위증의 의혹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행안부 공직자들이 소통하고 그리고 그 증거인멸 과정에 혹여라도 공모를 했을 개연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아까 장관님께서 감찰을 지시하시겠다고 하셔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안부의 태도와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상민 전 장관이

누구와 소통했는지를 자료로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안부에서 1차 답변을 뭐라고 보내왔냐면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두 번째 답변에서는 ‘기관 차원에서 확인할 권한과 방법이 제한된다’라는 답변을 해 오셨는데, 그 정도는 저도 당연히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라면 행안부의 공직기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진신고를 받을 것 같아요. 행안부 내에서 이상민 전 장관과 혹여라도 이러저러한 걸로 소통했다라고 하면 신고해라 그리고 그게 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판단하자,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찰하겠다는 거 하는 게 보다 적극적이고 내란을 대하는 기본 공직자의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저에게 보내온 답변서만을 보면 여전히 회피용인 것 같아요.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꼭 좀 장관님께서 챙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관련된 공직자가 있다면 그 공직자의 협조를 구해 보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끝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윤건영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 소요되는 기간이 5년 이상 걸리는 사업입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이번에 저희 당 지도부랑 충남 아산 지역 수해 현장을 다녀왔는데 2020년에 똑같은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고 올해 또 입었……

30초만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1분 더 쓰십시오.

○**윤건영 위원** 올해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산 사상구도 마찬가지고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수해 위험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를 확실히 당긴다든지 아니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지 않으면 공사 중인데 또 사고를 당하는, 그런 건 정말 국민들께서 억울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도개선할 사안이 있는지 장관님께서 꼭 좀 챙겨 봐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지금 다 마쳤는데요. 추가질의하기 전에 저도 잠깐 시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찰청 차장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사건 이게 지금 강제수사 없이 무혐의 종결되었단 말이에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위원장 신정훈** 그리고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금 송치하는…… 민원 제기한 사람도, 국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기준이,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결론, 이제 수사가 종결된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원장 신정훈 종결된 거잖아요, 사실상.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경찰에서는 종결이 일차적으로 됐다고 그러는데……

○위원장 신정훈 왜 경찰에서 이런 국민 정서나 고발인들의 입장이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놓고도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그런 어떤 보완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수사심의위원회는 고발인의 신청이 있으면……

○위원장 신정훈 자, 이런 결론이 나올 줄 이 고발인이 알았다면, 그런 절차를 이번에 제대로 고지했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절차를 준수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준수했다는 그 자료 낼 수 있어요? 고발인들한테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했냐는 말이에요. 이 과정, 절차를 왜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냐는 말이에요.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 청장이 그걸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종결 이후에 통보가 됐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종결 이후에…… 종결하기 전에 그런 통보를 해야지.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종결 이후에도 심의 요청이 있으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민원인들이나 제기한 사람들에게 이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거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두 번째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이 여러 차례 현장 압수수색도 되고 그랬는데 왜 수사 진행 상태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수사하고 있는 걸로……

○위원장 신정훈 법인카드 부정사용 실태 등이 여러 가지 강제수사 형태를 통해 가지고 상황이 지금 나온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 부분 수사 진행 상황을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제가 그 부분도……

○위원장 신정훈 신속한 수사를…… 방통위가 지금까지 해 온 여러 가지 독립성, 공정성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위원장의 도덕적인 해이가 여러 차례 제기됐단 말이에요. 신속하게 강제수사하고 또 필요하다면,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즉각적인 구속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관님, 제가 오늘 장관님 답변을 보면서 약간 속이 좀 답답했습니다. 여전히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사용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완고한지를, 저는 정말 답답해서 다시 한번 장관님께……

아마 상황이 장관님에게 제대로 보고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6개월 전부터 해당 부서 담당자들과 지난 정부에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서울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장관님? 소멸지역이 많은 소위 말해서 소멸에 직면한 시골지역과 도시지역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먼 단위만이라도 적절하니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비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먼 단위를 지키고 있는 영세점 규모, 그런 농협 마트를 이용하게 해 달라고 했더니 마트 형태가 없는 것을 어떻게 찾았는지 121개를 선정했어요. 그 마트 없는 것 121개를 선정한 것까지 참 훌륭했어요. 그런데 마트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트를 가 봤더니 24시간 편의점 수준이에요. 그리고 생필품이라 하더라도 과자 부스러기나 파는 정도의 가게뿐이에요.

수도 없이 이것 강조를 했는데 이제사 또 오늘 장관님 답변에,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마트 중에서, 마트가 존재하는 곳은 지금까지 허락을 안 했단 말이에요. 마트를 그중에서 다시 조사해 가지고 생필품을 파는 데가, 과일이나 소고기나 파는 데 있으면 또 제외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그게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조사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생지원 소비쿠폰이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소상공인 지원의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정훈** 장관님, 소상공인 보호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소홀히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소비진작, 민생회복 이것에 소비자의 최소한의 편의하고 선택권이 보장돼야 돼요.

그런데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은 소비쿠폰을 받은 소위 말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은 아마 100m 거리 내의 어디라도 가서 사용할 수 있는 미장원도 있고 이발소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소멸지역의 먼 단위는 그런 지역이 전혀 아니라는 걸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인공위성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이 지금 농협 마트를 제한하고 있는 무안군 운남면, 제가 사실은 현장에 가서 인터뷰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다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한번 봐 보세요. 무안군 운남면에 마트 형식이 있는 곳을 쭉 찾아봤어요, 인공위성으로.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나와요. 이 넓은 땅에 상점이라고는,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상가가 형성돼 있는 게 아닙니다. 길가에 하나 있는 거고 버스 승강장이 있는 데 하나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있다고 해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전까지는, 또 여기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한번……

그다음, 무안군 운남면에 있는 아까 인공위성 사진에 찍힌 그 마트들을 제가 또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한 지금 상황, 오전에 확인한 상황이에요. 슈퍼마켓이요 우리 대도시에

있는 슈퍼마켓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생활물자 자체가 없는 데도 많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제가 지금 여섯 군대를 찾았는데 마트라고는 쓰여져 있는데 완전히 소위 말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그런 제품이 있기가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 또 한참 가야 돼요.

다시 한번 넘겨 보세요.

그러면 무안군 운남면에 있는 하나로마트는 변변한, 우리가 대도시에서 상상하는, 서울에서 생각하는 그런 대형마트냐?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있어도, 여기에 가도 몇 가지 없어요. 대다수, 대한민국의 면 단위가 지금 천백칠십몇 개인데 5000 미만, 제가 알기로는 어림짐작으로 평균 2000명 정도밖에 거주하지 않는 그런 면 단위, 평균 인구가 20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면 소재지는 아까 이와 같은 상권이 형성된 게 아니라 가게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영상 한번 들어 보세요.

그 전에 여기, 이걸 제가 사는 나주시 왕곡면의 소재지에 있는 슈퍼마켓입니다. 슈퍼마켓 안에 있는 전경입니다. 그래서 농협 마트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외 어떤 가게도 없습니다. 왕곡면에는 미장원도 없고 이발소도 없고요 짜장면집도 없고요 치킨집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국민들이……

아니, 정부가 어렵게 어렵게 살림살이를 해서 소위 말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주셨는데 이걸 사용하는데 면의 노약자들이 읍까지 가서 사용해야 돼요. 그나마 이 소재지에 있는 아까 그런 형태의 농협 영세점도 이용하지 못하게 해놨다고요. 이게 합리적이냐?

마지막 영상 한 번만 보여 주십시오. 소리……

(영상자료 상영)

장관님, 제가 이 이야기를 담당자들하고 6개월 이상 했습니다.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 사진을요 일주일 전에 가서 찍어 갖고 온 거예요. 저 영상도 5일 전에 가서 만난 신안군 지역의 군 의원들하고의 면담을 통해서 제가 스스로 찍은 영상입니다. 이렇게 정 말……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가 아니잖아요. 지난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하나 사용하는 데도 그렇게 많은 소위 말해서 탄압을 했다고요. 지난 정부 지역사랑상품권에 정부가 지원해 준 것이 100원이면 2%였습니다, 2%. 지방비가 8%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90%는 자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 가지고 사용하는 가맹점 제한을, 사용처를 이렇게 제한하니 당연히 지역사랑상품권이 안 되는 거지요. 정말 절박하니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조그마한 할인율이라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심정일 텐데 이렇게 제한해 가지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안 되는 쪽으로만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담당자들하고 이야기했는데 겨우 121개라는 면 지역만 해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야기했더니, 제가 나주시청 공무원한테 카톡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했어요, 3일 전에. 해 가지고 이와 같은 사정을, 그냥 한 줄로 이야기했더라고요. 이용을 원하는 소위 말해서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는 지역은 다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보내라. 아주 부실하기 그지없고 성의도 없는 그런 수요조사를 가지고 오늘 장관님의 답변 과정

에 그 내용들이 잠깐 표현돼서 제가 조금 서운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행안부는 철저히 지방정부, 지방에 사는 국민들의 애로사항에 좀 귀기울여야 돼요. 지방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야 돼요.

하도,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설득하고 설득하고 5000 미만의 면만이라도 한번 해 보자, 아니면 읍이라도 5000 미만이 너무 많습니다. 상권이 없는 데라도 해 보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뭘 죄입니까? 나라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했는데 배 타고 나가서 압해도에서 사야 되고 또 읍내까지 나가 가지고 그 노인들이, 정말 버스도 타기 힘든 그 노인들이 읍내까지 나가야지 짜장면을 사 먹을 수 있다니까요. 면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가 봤자 변변한 것도 없어요. 이것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행안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제가 감정을 억누르기 참 쉽지 않습니다.

장관님, 새로 시작하시는 이 상황에서 업무를 살펴보기 쉽지 않았을 테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요,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정말 중심으로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위원장 신정훈 그리고 대도시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지방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 지방은 숨쉬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하는 것들을 행정안전부에서 좀 더, 정말 심각하게 이해하시고 정책을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기본적으로 소비쿠폰이든 지역사랑상품권이든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결정하는 권한을 지금처럼 이렇게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그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가지고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가 계속되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죄송합니다.

마지막 추가질의하실 분, 혹시 더……

○위성곤 위원 하나만, 30초만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1분.

○박수민 위원 저는 시간을 좀 켜 와 가지고, 고동진 위원님 시간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아, 그래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서범수 위원 아니, 우리 둘이 하겠다고……

○위원장 신정훈 두 분 해 주시고 두 분 해 주시고요.

서범수 위원님 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장관님, 지금 위원장님이 전부 15분 30초를 하셨지만 저도 그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좀 풀어 줘야 됩니다.

아니, 지자체에서 90%…… 주민들이 좀 편하게 써야 되지요. 그런데 꼴랑 행안부에서는 5%, 6%, 3% 하면서 장소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 제가 보니까 국무회의 때인가 임명장 받을 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님하고 웃으면서 악수를 하시는 걸 봤거든요. 인연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뭐 특별한 인연은 없습니다.

○서범수 위원 없지요? 참 속도 좋으십니다. 저 같으면 얼굴 보기도 싫을 것 같은데.

장관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양반? 무능한 어쩔고 어쩔고, 그리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또 그런 자극이 있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서범수 위원 우상호 정무수석,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한테도 어쩔고 어쩔고 막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인사혁신처장의 인사관과는 다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분이 욕한 사람들은 다들 핵심 요직에 전부 임명을 하셨어요, 결과론적으로. 이것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해석해 드릴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지난 십수 명의 국무위원, 장관들 청문회 할 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흠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낙마를 했습니다, 교육부장관 그다음에 여가부장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교육부장관이나 여가부장관,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해야 될 핵심적인 어떤 보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데 이걸 위배한 분을 임명하니까 결국은 여론에 못 이겨서 낙마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육부장관도 그렇고 강선우 장관도 그렇고. 그렇게 안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인사에 관한 사안이라……

○서범수 위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될 부처의 장관을 갑질하는 분으로 갖다 놓으니 여론이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그러니 여론에 의해서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의 고위공직자 7대 비리 원칙에 대해서는 ‘아주 명칭한 기준이다’라고 막말도 하셨고 그리고 황교익 음식 칼럼니스트를 그때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하니까 ‘인사는 원래 코드 인사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인사혁신처장이 뭐 합니까? 75만의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공정하게 채용하고 교육하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과연 이런 분이 인사혁신처장으로 그 가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정한 채용, 승진,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도 그 전임 두 장관하고 비슷한 스타일이 아니냐.

그래서 장관님이, 내각처 사무 아닙니까? 내각사무처, 옛날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님, 혹시 해임 건의할 생각 없으세요, 이런 분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웃음)

○서범수 위원 웃음으로 답을 하신 걸로 제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답변해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짧게 하나만 좀, 건의인데요.

행안부장관이 재난 관련되어진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에너지 요금, 에너지바우처 제도라는 게 산업부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전 기나 가스, 지역난방 LPG 이런 요금을 바우처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체납자가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려워서 체납을 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그 사람들한테 아예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 운영에 대해서 장관께서 좀 챙겨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안부장관님, 소비쿠폰 집행하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수민 위원 제가 실태조사와 경제성분석을 아주 강조했고 기다리고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또 2차 추경 때 그런 조사용역을 위해서 2억을 따로 편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실태 분석과 경제성 효과 분석인데 지금 현장에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와 잡음들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소득 계층별로 카드 색상을 다르게 했다가 이게 상당히, 이것 감수성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수민 위원 그래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고요.

또 행안부에서 어디가 30억 이하 매출처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용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는데 거기서 개인정보가 노출이 됐습니다. 인지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카드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다 시정조치를 했고요. 또 광주 사례 같은 경우도 스티커를 전부 붙여서 그렇게 소득 수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응급조치는 잘하셨고요. 실태 분석해서, 반복되면 안 되니까 꼬박 누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런 것에서는 항상 카드깡이라든지 각종 편법, 치팅이라고 하지요. 30억 이하 매출처의 카드사용기를 가져와서 매출을 하는 30억 이상의 사용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 꼼꼼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보고받고 있고요. 엄중한 처벌 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리고 수박이라든지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한 신선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가격이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점도 경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장관 되시자마자 19조 원 넘게 집행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라서 꼼꼼히 파악 되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수박은 폭우와 또 폭염 때문에 영향을 받은 면도 있기 때문이에요.

○**박수민 위원** 그럴 겁니다. 복합적일 거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동시에 제가 행안부에서 자료를 내줘서 과거에 경제성분석 했던 것 잘 받았습시다. 감사하고요.

다만 GDP라든지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시점별로, 두세 달은 당연히 효과 있습니다. 그다음이 문제거든요. 잘 분석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다들 배고프실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2023년 12월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실, 사건 16건에 대해서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런데 5·18민주화운동 보상법에 근거해서 당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상이를 입은 분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정춘생 위원**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들은 정말 수십 년간 가족에게도 얘기 못 하고 그 트라우마와 고통 속에서 살다가 최근에야 목소리를 내고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국회에서도 피해자 증언 대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5·18민주화운동 보상법에 근거해서 이분들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 근거 조항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근거 조항은 없지만 보상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직 안 됐습니까?

○**정춘생 위원** 예, 진상규명 결정만 돼 있고요. 아직 법령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보상

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추미애 의원께서 관련 법 개정안을 낸 바 있고, 법 개정이 더디면 시행령으로라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해 주시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5·18보상지원위원회에서 작년 2월에 의결이 돼서 지급 기준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5·18보상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게요.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된 사례가 몇 건이 있는지요? 실무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예.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이성권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은 서면답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님 그리고 경찰청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보좌 직원 여러분 모두모두 고생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 위원(21인)

고동진 권칠승 김성희 모경중 박덕흠 박수민 박정현 서범수 신정훈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달희 이상식 이성권 이해식 정춘생 채현일
한병도

○청가 위원(1인)

주호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조직국장 이창규
지방행정국장 조영진
비상대비정책국장 김정학
정책기획관 임철언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시설기획관 박종현
대통령기록관
관장직무대리 허영지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기획조정관 도준수
범죄예방대응국장 고평기
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경비국장 임정주
수사국장 김병찬
과학수사심의관 박우현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박정훈